

2006. 7. 21

『大首都論』에 대한 반대 결의안

충청북도의회

『大首都論』에 대한 반대 결의안

최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제기하는 소위 『大首都論』의 주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처사로서 충청북도의회는 150만 도민과 더불어 분노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기형적인 불균형 상태에 이르렀으며, 수도권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국토의 11.8% 불과한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 몰려있고 공공기관의 80%, 대학의 41%, 100대 기업의 91%가 밀집되어 있어 이로 인한 주택난과 교통혼잡, 각종 환경공해 등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으며, 한편으로 지방의 소외와 낙후를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 수도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大首都論』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춘 실체로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극화하여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 대화합과 국가경

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대명제에 정면 배치됨은 물론, 지방의 위축을 초래하고 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동 번영하는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단체장의 근시안적 시각과 지역이기주의 발상인 『大首都論』을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수도권 공룡화와 비수도권 공동화로 모두가 공멸을 자초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중한 사과와 『大首都論』에 대한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50만 도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一. 정부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임을 직시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 실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라
- 一. 수도권 단체장들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大首都論』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비수도권과의 상생 화합대열에 적극 동참하라.

2006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